

「 2022년 1월 15일 시행 」

##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번호	
성명	

### 【인문사회계열 : 선택과목】

선택유형	선택과목 ( 1 )	선택과목 ( 2 )	선택과목 표기 ( ○ )
1	행정학	민법총칙	
2	행정학	형사소송법	
3	행정학	경제학	
4	행정학	소방학개론	
5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6	민법총칙	경제학	
7	민법총칙	소방학개론	
8	형사소송법	경제학	
9	형사소송법	소방학개론	
10	경제학	소방학개론	

#### ※ 주의사항

1.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선택하신 선택과목 ( 1 ), 선택과목 ( 2 )가 시험지의 선택과목 ( 1 ), 선택과목 ( 2 ) 및 답안지의 선택과목 ( 1 ), 선택과목 ( 2 )와 동일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답안지는 원서접수 시 선택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됩니다.



**소방청**



# 【 행정 학 】

1.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을 관찰가능한 객관적인 대상으로 보며, 인간의 주관이나 의식을 배제하고 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하려 한다.
- ②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이 사람들의 의식, 생각, 언어, 개념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주관적인 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③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 시민을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하며, 방법론적 전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 ④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을 자연적·사회적·문화적 환경과 관련시켜 이해하려고 한다.
- ⑤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을 포괄적인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이라고 파악하여 통합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2.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발 요인
- ② 회귀인공 요인
- ③ 성숙 요인
- ④ 호손효과 요인
- ⑤ 측정수단 요인

3. 총체주의 예산이론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ㄱ. 예산은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다.
- ㄴ. 예산과정을 행정부와 의회의 선형적 함수관계로 파악한다.
- ㄷ. 예산은 한계효용 개념을 이용한 상대적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 ㄹ. 참여자 간의 합의를 중시한다.
- ㅁ. 예산의 규모는 사회후생 극대화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 ⑤ ㄴ, ㄹ, ㅁ

4. 다음 제시문이 설명하는 정책분석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문제를 더 작은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이 요소들을 둘씩 짝을 지어 비교하는 일련의 비교판단법이다. 이러한 비교판단을 통해 각 요소들의 영향력에 대한 상대적인 강도와 효용성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 ① 외삽법(Extrapolation)
- ② 정책델파이방법(Policy Delphi Method)
- ③ 교차영향행렬(Cross Impact Matrix)
- ④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 ⑤ 계층화분석법(Analytical Hierarchy Process)

5. 정부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ㄱ. 관리규제란 정부가 피규제자가 만든 목표 달성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이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 대표적 예이다.
- ㄴ. 포지티브규제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이 자유롭다.
- ㄷ. 포획이론은 정부가 피규제자에게 포획됨으로써 일반 시민이 아닌 특정 집단의 사익을 옹호한다고 말한다.
- ㄹ. 윌슨(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따르면, 고객정치 상황에서는 응집력이 강한 소수의 편익수혜자와 소수의 비용 부담자가 격렬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 ㅁ. 규제피라미드는 규제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막기 위해 또 다른 새로운 규제가 반복해서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6. 조직의 갈등관리 방법 중 해소전략에 속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ㄱ. 회피
- ㄴ. 상위목표의 제시
- ㄷ. 협상
- ㄹ. 리더십 스타일의 변경
- ㅁ. 인사이동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7. 정책의제설정모형 중 동원형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이익집단들이 발달한 다원주의 정치체제에서 많이 나타난다.
- ② 정책확장이 정책에 대하여 특별한 지식이나 관심을 가진 집단들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 ③ 정부지도자들이 대중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관계 캠페인을 벌인다.
- ④ 쟁점의 확산과 진입에 있어 언론의 역할이나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 ⑤ 최고통치자나 고위정책결정자보다 낮은 직위의 관료의 의제형성을 주도한다.

8. 다음 [표]에 제시된 재화와 서비스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성		경합성	
		높음	낮음
배제성	쉬움	㉠	㉡
	어려움	㉢	㉣

- ① ㉠은 시장에서 소비되는 재화로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자동적으로 조절된다.
- ② ㉡은 공동으로 소비하지만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기업 등이 주로 공급을 담당한다.
- ③ ㉢은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하는 재화로서 지나친 남용으로 인한 자원 고갈의 염려가 있다.
- ④ ㉣은 초기 구축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비용체감산업의 특성이 있다.
- ⑤ ㉢과 ㉣은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9. 행정의 가외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외성은 능률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적응력을 높인다.
- ② 가외성이 전체의 신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조건은 각 부분이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 ③ 가외성은 대체수단의 확보 등으로 수단과 목표의 전도 현상을 완화시킨다.
- ④ 조직의 과업환경이 이질적이고 불확정적인 때에 가외적 구조를 가진 조직은 생존가능성이나 과업성취가능성이 높다.
- ⑤ 기능이 중첩·중복되는 조직에서는 의견이나 이해관계가 달라 조직 간의 충돌가능성이 높다.

10. 관료의 예산극대화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관료와 정치인은 쌍방독점의 관계이다.
- ② 관료는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 ③ 이 모형은 1980년대 진행되었던 영국의 행정개혁을 적절하게 설명한다.
- ④ 월다브스키(Wildavsky)가 주장한 것으로 관료는 소속 부서의 예산규모를 극대화한다.
- ⑤ 관료는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교차하는 점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 한다.

11. 국채 우선 상환 이후 세계잉여금의 사용 순서를 <보기>에서 옳게 연결한 것은?

—<보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ㄱ. 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li> <li>ㄴ.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li> <li>ㄷ.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li> <li>ㄹ.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li> <li>ㅁ. 기타 채무(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국가배상금 등) 상환</li> </ul>
---

- ① ㄱ → ㄴ → ㄹ → ㅁ → ㄷ
- ② ㄱ → ㄴ → ㅁ → ㄷ → ㄹ
- ③ ㄱ → ㄴ → ㅁ → ㄹ → ㄷ
- ④ ㄴ → ㄱ → ㄹ → ㅁ → ㄷ
- ⑤ ㄴ → ㄱ → ㅁ → ㄷ → ㄹ

12. 옴부즈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채택된 옴부즈만은 입법부 소속으로, 직무수행상 의회의 간섭과 통제를 받았다.
- ② 옴부즈만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한정된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옴부즈만이다.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를 통제 대상으로 삼는다.
-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권조사권을 갖고 있어 고충 민원 신청이 없어도 사전심사와 구제가 가능하다.

13. 정책과정의 권력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전적 엘리트이론은 '과두제의 철칙론'을 제시한다.
- ② 무의사결정은 지배 엘리트집단의 이익에 반하는 의제가 정책과정에서 채택되지 않도록 한다.
- ③ 다원주의론에서 정책의 주도자는 경쟁하는 이익 집단들이다.
- ④ 하위정부모형은 행정관료, 의회 위원회, 이익집단 간의 갈등적 경쟁관계를 강조한다.
- ⑤ 조합주의에서는 이익집단의 자율성이 제약된다.

14.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리모형은 분석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
- ② 점증모형은 치열한 정치적 협상을 통해 결정되므로 과거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 ③ 최적모형은 양적 분석뿐만 아니라 질적 분석도 동시에 고려한다.
- ④ 쓰레기통모형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소는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기회의 흐름이다.
- ⑤ 만족모형은 행정인이 아닌 경제인의 가정에 기초하여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한다.

15. 공무원 평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면평가제도는 다수의 평정자로 인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② 도표식 평정법은 상벌의 목적에 이용하기 편리하다.
- ③ 행태기준 평정척도법은 행태에 관한 구체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평정하며, 사건의 빈도수를 표시하는 척도를 이용한다.
- ④ 우리나라는 평정결과에 대해 소청할 수 없다.
- ⑤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해 시험의 타당도를 측정할 수 있다.

16. 인사행정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표관료제는 출신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관료제 내부통제의 효과가 있다.
- ② 정실주의는 미국에서 처음 발달한 것으로 인사권자의 개인적 신임이나 친분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 ③ 실적주의는 인사행정을 소극적·경직적으로 만든다.
- ④ 직업공무원제는 전문행정가의 양성을 저해한다.
- ⑤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향상시킨다.

17.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한정되어 있다.
- ②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③ 재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 절차에 준해 집행한다.
- ④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 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⑤ 국고채무부담행위 사항마다 행위연도와 상환연도 및 채무부담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18. 목표관리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권 및 참여적 요소를 중시한 예산 제도이다.
- ② 종합적인 5개년 사업계획에 기반하여 예산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계획예산제도의 특성을 배합한 것이다.
- ④ 조직 내적 관점에서의 목표에 따른 산출량에 초점을 둔다.
- ⑤ 조직구성원들이 결과에 대해 책임을 느끼게 하는 조직문화를 배양할 수 있다.

19. 회사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적 차원의 만족모형을 조직 차원의 의사결정에 적용한 모형이다.
- ② 회사를 상이한 개성과 목표를 가진 개인의 연합체로 정의한다.
- ③ 조직환경을 매우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회사는 내부 갈등을 상급자의 권위를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 ⑤ 부분 최적화를 통한 국지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20. 리더십의 행태적 접근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블레이크(Blake)와 모턴(Mouton)은 사람중심과 생산중심의 2가지 행태 모두 중간 수준인 유형을 가장 성공적인 리더로 본다.
- ② 화이트(White)와 리피트(Lippitt)는 권위형, 민주형, 자유방임형으로 리더유형을 구분하였다.
- ③ 미시간 대학의 연구에서는 리더의 행태를 생산중심과 직원중심으로 구분하였다.
- ④ 리더십은 특정 행태에 기인하므로 훈련을 통해 습득 가능하다고 본다.
- 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연구에서는 구조주도행동과 배려행동을 중심으로 4가지의 리더십 유형을 제시하였다.

21. 매트릭스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능구조의 기술 전문성과 제품사업부의 혁신을 동시에 꾀한다.
- ② 조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확보·배분·이용한다.
- ③ 구성원들이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 ④ 이원적 조직구조로 인한 상호작용 증가로 조직 내 갈등 수준을 완화한다.
- ⑤ 조직이 변화하는 환경에 좀 더 유연하게 적응한다.

22.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78년 미국의 연방공무원개혁법에 의하여 최초로 도입되었다.
- ②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 ③ 광역시의 행정부시장과 도의 행정부지사는 고위 공무원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정부의 정책결정과 연관된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고위직 인사의 질적 관리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 ⑤ 고위공무원단의 직위는 개방형직위, 공모직위, 기관(부처) 자율직위로 구분된다.

23. 신제도주의 접근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와는 달리 제도를 사람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독립변수로 본다.
- ②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사례중심의 귀납적 연구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 ③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일단 형성되면 방향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경로의존성을 주장한다.
- ④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인간의 표준화된 행동 코드가 제도 내에 배태되어(embedded) 있다고 본다.
- ⑤ 최근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내생적 요인과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이 제도변화의 중요한 요인임을 인정한다.

24.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목으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광역시 - 지역자원시설세
- ② 시/군 - 담배소비세
- ③ 도 - 레저세
- ④ 자치구 - 재산세
- ⑤ 특별/광역시 - 등록면허세

25. 「공직자윤리법」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 윤리 사항인 것은?

- 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 ② 이해충돌방지의무
- ③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 ④ 재산 등록 및 공개
- ⑤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 【 민법총칙 】

1. 민법상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관습법에는 성문법을 개폐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 ③ 관습법의 존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④ 관습법이 법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의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⑤ 관습법으로 성립되더라도 이후 사회 구성원들이 그 관습법에 대해 법적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면 더 이상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는다.

2.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
- ② 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후에 부재자의 사망사실이 확인되었다면, 법원의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산관리인은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입할 수 있다.
- ④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⑤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그 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의 만료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

3.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기본재산이 변경되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 ②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 ③ 정관 규정에 따라 기본재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라면, 그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다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 ④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자산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⑤ 재단법인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는 자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재단법인을 상대로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4. 민법상 법인의 법률행위와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인이 대표기관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②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대표자의 직무행위에는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직무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③ 법인의 대표권이 없는 이사가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민법」 제35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법인의 대표기관의 직무에 관한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과실에 대해서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⑤ 「민법」 제35조에 따른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개인으로서 대표기관은 피해자에게 법인과 함께 배상책임을 진다.

5.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유골은 제사나 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그 제사주 재자에게 승계된다.
- ② 건축 중인 건물이 기둥만을 갖춘 채 아직 지붕이나 주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다.
- ③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 ④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주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편익에 제공되고 있으면 종물에 해당한다.
- ⑤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6. 비진의표시(「민법」 제107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는 동시에 비진의표시에 의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 ② 비진의표시에서의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한다.
- ③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 ④ 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⑤ 「민법」 제107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통정허위표시에서 보호받는 제3자는 선의이며 무과실이어야 한다.
- ③ 허위의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이라 하더라도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 ④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자신이 선의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⑤ 가장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전세권근저당권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할 수 없다.

8. 협의의 무권대리인 乙이 자신을 甲의 대리인이라고 소개하면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丙이 알았다면 丙은 甲에게 乙의 행위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 ②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철회하였다면 乙의 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이후 甲은 더 이상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 ③ 乙이 甲을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 乙은 甲의 지위에서 무권대리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④ 甲은 乙 또는 丙뿐만 아니라 丙으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 ⑤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에 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丙이 그와 같은 추인의 의사표시를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9. 甲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하여 거래 허가의 취득에 상호협력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거래 허가가 있기 전이라도,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면, 乙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는, 甲과 乙의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허가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 ③ 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는, 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 ④ 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 甲이 乙에게 토지거래허가절차 협력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
  - ⑤ 계약체결 이후 X토지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甲과 乙은 다른 조치 없이 곧바로 상대방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10.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유권
- ② 점유권
- ③ 공유물분할청구권
- ④ 공사대금지급청구권
- ⑤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

1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 ② 소멸시효의 항변권 행사에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강행규정 및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약정을 한 후, 그 약정의 당사자가 강행규정 및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④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려면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를 필요까지는 없다.
- ⑤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수년간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그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지급한 경우 위 생명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12. 민법상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성년후견선고는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그 대상이 된다.
- ② 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피성년후견인이 위조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상대방에게 제시하면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④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 ⑤ 피성년후견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추인이 있기 전까지 그의 의사표시를 거절할 수 있다.

13. 민법상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 ②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재산관리 중에 과실 없이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실종선고 후 실종자가 살아서 돌아온 경우라도 실종선고의 취소 전에는 실종선고의 효력은 상실하지 않는다.
- ④ 실종기간 만료시와 실종선고시 사이에 부재자의 채권자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그 판결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⑤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법원이 필요한 처분을 명한 후에는 부재자 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14. 민법상 법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인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도 이사의 대표권은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고, 이를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②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요건(「민법」 제35조)이 구비되면 법인은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지만, 법인이 그 대표기관의 선임·감독에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 ③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 ④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민법」 제34조), 그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에는 정관에 목적으로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 ⑤ 법인은 타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는 없지만, 특정유증뿐만 아니라 포괄유증도 받을 수 있다.

15.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인의 임시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임명한다.
- ② 이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 ③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④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사원의 지위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다.
- ⑤ 민법상 법인에서 이사가 다수 있는 경우에도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착오로 인하여 착오자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해진 경우에는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할 수 없다.
- ② 착오의 존재 여부는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은 착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④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③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④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령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채권양도의 통지에서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을 때를 지칭하고,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18. 甲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상 그 대리권이 소멸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 ① 甲의 사망
- ② 乙의 사망
- ③ 乙의 한정후견의 개시
- ④ 乙의 파산
- ⑤ 乙의 성년후견의 개시

19.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③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일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 ④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토지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약정은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0.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 전의 사전승인도 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
- ②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 ③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④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⑤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1.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더라도 재량에 따라 실종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③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④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이면 그 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⑤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가 선박의 침몰 후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22.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상품의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 ④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민법」 제110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⑤ 어떤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3.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②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 ③ 본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 ④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⑤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본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24.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 및 대리인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동하여 본인을 대리한다.
- ②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③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 ④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25. 민법상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③ 대리권없는 자가 대리인으로 체결한 계약을 본인이 추인하는 경우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④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에도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추인의 효력이 있다.
- ⑤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형사소송법 】

1.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에 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ㄴ.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을 이유로 검사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ㄷ.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 ㄹ.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그 서류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ㅁ. 검사는 고소·고발된 범죄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후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 또는 구두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필요한 경우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다.

2.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②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③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것이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 ④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
-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 제5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을 폐기한 때에는 폐기의 이유와 범위 및 일시 등을 기재한 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피의자의 수사기록 또는 피내사자의 내사사건 기록에 첨부하고 폐기일부터 14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ㅁ

3.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인신문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검증·감정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③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인 경우에는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4.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게재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하므로 그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해야 하고, 게시물이 삭제된 시점을 범죄의 종료시기로 보아 그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된다.
- ④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⑤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의 기간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고 완성여부도 당초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한다.

5.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결정은 위법하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하며, 이 경우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 ③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그럼에도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 ④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위법하다.
- ⑤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변호인선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게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 ②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하였다든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 ③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접견신청을 하였을 때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라도 피의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변호인의 접견이 강제될 수 있다.
-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불구속 피의자·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신체 구속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⑤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4조는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한 재심개시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청구절차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7.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수사기관은 전자정보의 복사 또는 출력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압수목적물인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관서로 반출할 수 있다.
- ③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더라도 그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 ④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8.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문진술을 증거로 하는 경우에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한다.
- ②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한 서류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수 있다.
- ④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 두었다가 직접 메모리카드에 입력하거나 업주가 고용한 여직원이 그 내용을 입력한 경우 위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
- ⑤ 소재불명한 참고인의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9.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지만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 ③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이상 각 서증들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④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⑤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0. 약식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발령한 벌금보다 중한 벌금을 선고할 수 없다.
- ③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1.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성립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정도로 양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자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② 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 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③ 상고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지만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 ④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재산범죄로서 그에 대한 형벌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 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배임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 ⑤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에게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어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더라도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

1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이익변경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②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 ④ 추징도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으로서 몰수와 마찬가지로 형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 ⑤ 피고인만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3.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변호인,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 ②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③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은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 ④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하지만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14. <보기>의 (ㄱ), (ㄴ)에 들어갈 용어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가) A가 B의 성명을 모용하여 A가 아닌 B의 이름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은 명의를 모용한 A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A만이 피고인이 된다. 피모용자 B에게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검사는 ( ㄱ ) 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 잡아야 한다.

(나) A가 B의 성명을 모용하여 피모용자 B가 약식명령서를 송달받게 되었다. 이 경우 B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직접 공판절차에 참여하면 사실상 소송계속이 발생하게 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피모용자 B에 대하여 ( ㄴ )을 선고해야 한다.

- | ㄱ       | ㄴ      |
|---------|--------|
| ① 공소장정정 | 공소기각결정 |
| ② 공소장정정 | 공소기각판결 |
| ③ 공소장변경 | 공소기각결정 |
| ④ 공소장변경 | 공소기각판결 |
| ⑤ 공소장취하 | 공소유지판결 |

15.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수사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 ③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 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
- ④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⑤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재심청구의 대상인 확정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청구에 관여한 경우

ㄴ.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ㄷ. 제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가 항소심 재판에 관여한 경우

ㄹ.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제1심에 관여한 경우

ㅁ. 환송판결 전의 원심에 관여한 재판관이 환송 후의 원심재판관으로 관여한 경우

- ① ㄷ
- ② ㄹ
- ③ ㄱ, ㅁ
- ④ ㄴ, ㄹ
- ⑤ ㄱ, ㄷ, ㅁ

17.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증거물을 압수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거나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 ②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신분비공개수사가 현행법상 명문으로 허용된다.
- ③ 사법경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에 착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미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한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 ④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이 재량에 따라 이를 허락하더라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 ⑤ 피고인이 된 피의자가 사법경찰관의 여죄 추궁 끝에 다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는 자수라고 할 수 없다.

18.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진술을 영상녹화할 때는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②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영상녹화가 완료되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별도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참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물의 재생을 통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19. 공소사실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경우 교사나 방조의 사실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죄사실도 특정하여야 한다.
- ②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이상 구체적 범죄사실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법원은 곧바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③ 경합범의 경우에는 각 행위마다 그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
- ④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중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 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위법한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이라는 헌법이념을 실현하고자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에는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범행현장에서 피해자 소유 대상물인 맥주컵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 지문채취 대상물인 맥주컵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채취한 지문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⑤ 구속영장의 집행 당시 구속영장이 사전에 제시된 바 없다면 그와 같은 구속 중에 수집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1. 당사자의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 ③ 증거동의를 효력은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는 경우에도 유지된다.
- ④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서 전문증거에 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증거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⑤ 증거동의를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2.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행한 자백에도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된다.
- ②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실제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 ④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3. 재판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발령시가 아닌 송달시를 기준으로 한다.
- ②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기준시점은 항소심 판결선고시이다.
- ③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④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 ⑤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가지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4. 항고와 준항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 ②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 ③ 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 ④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하여 준항고가 허용되므로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지방법원판사의 결정에 대해서도 준항고할 수 있다.
- ⑤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지만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25. 상소이익에 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소도 할 수 있다.
- ㄴ.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건의 실체에 관한 이유로 무죄판결을 구하는 상소를 할 수 있다.
- ㄷ. 피고인이 벌금형의 실형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해달라는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ㄹ.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에서 벗어나므로 무죄를 주장하면서 상소할 수 없다.
- ㅁ. 피고인은 자신에게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상소할 수 없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ㄱ, ㄴ, ㄹ, ㅁ
- ④ ㄱ, ㄷ, ㄹ, ㅁ
- ⑤ ㄴ, ㄷ, ㄹ, ㅁ

## 【 경제학 】

1.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의 배제성과 경합성의 존재 유무에 따라 분류할 때,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동시에 갖는 재화로 옳은 것은?
  - ① 국방
  - ② 일반적 지식
  - ③ 민자 유료도로
  - ④ 민간 구급 서비스
  - ⑤ 공해(公海)상의 어류
  
2. 독점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독점기업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절댓값이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생산하지 않는다.
  - ② 독점기업이 항상 양(+)의 이윤을 얻는 것은 아니다.
  -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을수록, 독점기업에 대한 러너(Lerner)의 독점력 지수도 낮아진다.
  - ④ 독점기업은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한다.
  - ⑤ 독점기업이 완전한 가격차별을 하는 경우 경제적 손실(Deadweight Loss)은 발생하지 않는다.
  
3. 로렌즈곡선과 지니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로렌즈곡선은 사회구성원을 소득이 가장 낮은 구성원부터 높은 구성원 순으로 일렬로 배열하였을 때, 그 누적소득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② 소득분배가 불균등할수록 로렌즈곡선은 대각선에 더 가까워지게 된다.
  - ③ 서로 다른 두 나라의 로렌즈곡선은 교차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④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 ⑤ 지니계수가 클수록 소득분배의 불균등 정도는 더 커지게 된다.
  
4. 피셔가설(Fisher Hypothesis)이 완벽히 성립하는 경제에서 실질이자율이 2%이고 인플레이션율이 4%이다. 이자소득세율이 20%라면, 세후 명목이자율은?
  - ① 2.8%
  - ② 4.8%
  - ③ 6%
  - ④ 7.2%
  - ⑤ 8%
  
5. 중고차 시장에서 품질에 대한 '감춰진 속성(hidden characteristics)'이 존재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골라내기(Screening)는 '감춰진 속성'의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 ② 신호발송(Signaling)을 통해 '감춰진 속성'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 ③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④ '감춰진 속성'이 없는 경우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고차의 품질이 나빠진다.
  - ⑤ '감춰진 속성'으로 인해 중고차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타난다.
  
6. 소비자 갑의 효용함수는  $U(X, Y) = X^a Y^b$ 이다. (단,  $a+b=1$ ) 소비자 갑이 X재를 2단위, Y재를 4단위 소비할 때, 그의 X재와 Y재 간 한계대체율이 4라면,  $a$ 는?
  - ①  $\frac{1}{4}$
  - ②  $\frac{1}{3}$
  - ③  $\frac{1}{2}$
  - ④  $\frac{2}{3}$
  - ⑤ 1

7. 통화공급은 현금과 요구불예금의 합이며, 본원통화는 현금과 지급준비금의 합이라고 정의하자. 이때 현금-예금 비율(현금/예금)이 0.6이고, 지급준비금-예금 비율(지급준비금/예금)이 0.2라면, 통화승수는?

- ① 1.5                      ② 2.0                      ③ 2.5
- ④ 3.0                      ⑤ 3.5

8. X재의 수요곡선은  $Q^D = 100 - P$ 이고, Y재의 공급곡선은  $Q^S = P - 20$ 이다. (단,  $P$ 는 가격이고,  $Q^D$ 는 수요량,  $Q^S$ 는 공급량을 나타낸다.) X재의 수요곡선상의 한 점인  $(P, Q) = (60, 40)$ 에서의 수요의 가격탄력성 및 Y재의 공급곡선상의 한 점인  $(P, Q) = (100, 80)$ 에서의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단, 탄력성은 절댓값으로 나타낸다.)

수요의 가격탄력성      공급의 가격탄력성

- |   |     |      |
|---|-----|------|
| ① | 1   | 0.75 |
| ② | 1   | 1    |
| ③ | 1.5 | 1    |
| ④ | 1.5 | 1.25 |
| ⑤ | 2   | 1.25 |

9. X재의 수요곡선은  $Q^D = 200 - P$ 이고, X재의 공급곡선은  $Q^S = P - 40$ 이다. (단,  $P$ 는 가격이고,  $Q^D$ 는 수요량,  $Q^S$ 는 공급량을 나타낸다.) 이때 X재에 대해 단위당 20원의 세금이 부과될 경우, 그에 따른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비자잉여는 750원 감소한다.
- ② 거래량은 10단위 감소한다.
- ③ 생산자의 순수취 가격은 20원 감소한다.
- ④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10원 상승한다.
- ⑤ 경제적 손실(Deadweight Loss)이 100원 발생한다.

10. 갑의 소득( $I$ )에 대한 효용함수는  $U(I) = I^{0.5}$ 이다. 갑은 구매한 복권으로부터 각각 50%의 확률로 16만원과 64만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복권에 대한 갑의 확실성등가(Certainty Equivalent)와 위험프리미엄(Risk Premium)은?

확실성등가      위험프리미엄

- |   |       |      |
|---|-------|------|
| ① | 36만 원 | 4만 원 |
| ② | 36만 원 | 5만 원 |
| ③ | 25만 원 | 5만 원 |
| ④ | 25만 원 | 6만 원 |
| ⑤ | 16만 원 | 6만 원 |

11. 게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월전략이란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지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최적인 전략이다.
- ② 내쉬균형은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진 상태에서 각 경기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균형이다.
- ③ 일반적으로 쿠르노-내쉬균형에서 각 경기자가 얻는 이윤은 담합한 경우의 이윤보다 작다.
- ④ 순수전략만을 허용하면 내쉬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게임이라 할지라도, 혼합전략을 허용하면 적어도 하나의 내쉬균형을 갖게 된다.
- ⑤ 순차게임에서 내쉬조건은 완전균형(perfect equilibrium)에 도달하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12. 생산과정에서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X재의 수요곡선은  $P = 100 - Q$ 이고, 사적한계비용(Private Marginal Cost,  $PMC$ )은  $PMC = Q + 20$ 이며, 생산과정에서  $PMC$ 에 부가해서 발생하는 한계외부비용(Marginal External Cost,  $MEC$ )은  $MEC = Q + 50$ 이다. (단,  $P$ 와  $Q$ 는 각각 가격 및 수량을 나타낸다.) 이 경우 X재의 사회적 최적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X재에 대해 단위당 부과해야 하는 세금은?

- ① 20                      ② 30                      ③ 40
- ④ 50                      ⑤ 60

13. 개방경제의 국민소득결정모형에서 소비와 수입은 각각  $C=500+0.6Y$ ,  $M=200+0.1Y$ 이다. 그리고 투자, 정부지출 및 수출의 합계는 5,000조 원이다. 이 경우 정부지출이 50조 원 증가한다면, 균형국민소득의 변화량은? (단,  $Y$ ,  $C$ ,  $M$ 은 각각 국민소득, 소비, 수입이고, 구축효과는 없다고 가정한다.)

- ① 0원
- ② 50조 원
- ③ 100조 원
- ④ 150조 원
- ⑤ 200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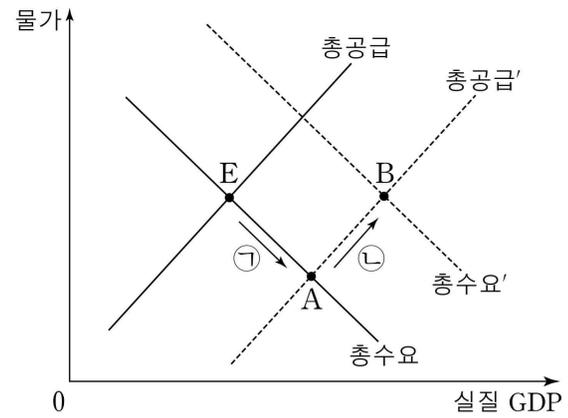
14. 항상소득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상소득은 평균소득이며, 일시소득은 평균에서 무작위적으로 벗어난 소득이다.
- ② 사람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소비는 주로 항상소득에 의존한다.
- ③ 항상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일시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에 비해 더 크다.
- ④ 현재소득이 일시적으로 항상소득 이상으로 증가하면 평균소비성향은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 ⑤ 평균소비성향은 현재소득에 대한 항상소득의 비율에 의존한다.

15. 소규모 개방경제인 갑국의 X재에 대한 국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각각  $Q^D=400-2P$ ,  $Q^S=\frac{1}{2}P-50$ 이고, X재의 국제가격은 130이다. (단,  $P$ 는 가격이고,  $Q^D$ 는 수요량,  $Q^S$ 는 공급량을 나타낸다.) 갑국이 X재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 관세 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Deadweight Loss)과 추가적인 생산자잉여(Producer Surplus)의 합은?

- ① 600
- ② 700
- ③ 800
- ④ 900
- ⑤ 1,000

16. 다음 [그림]은 갑국 국민경제 균형점의 변화 (㉠: E → A, ㉡: A → B)를 나타낸다. 이러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을 옳게 짝지은 것은?



- ① ㉠: 수입 원유가격의 하락  
㉡: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
- ② ㉠: 소득세율의 인상  
㉡: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인하
- ③ ㉠: 가계 소비의 증가  
㉡: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각
- ④ ㉠: 해외 경기 침체로 수출이 감소  
㉡: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
- ⑤ ㉠: 임금 인상으로 생산비용이 상승  
㉡: 법인세율의 인하

17. 2021년 초에 갑국 경제의 생산가능인구는 4,000만 명, 경제활동참가율은 75%, 그리고 실업자는 500만 명이다. 또한, 갑국에서 2021년에 실업자가 일자리를 구할 확률은 20%이며, 취업자가 일자리를 잃을 확률은 4%이다.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이 불변이라고 가정할 때, 2022년 초의 예상 실업률은? (단, 근삿값으로 구하시오.)

- ① 11.1%
- ② 12.5%
- ③ 14.5%
- ④ 15.5%
- ⑤ 16.7%

18. 다음 제시문은 갑국에서 특정 연도에 발생한 생산 활동이다. 국내총생산(GDP)은?

어부 A가 미끼와 그물 등의 원료구입비 10만 원을 들여 참치를 잡았고, 이를 중간 도매상 B에게 100만 원을 받고 팔았다. 중간 도매상 B는 참치의 일부를 C 횡집에 80만 원에 팔았고, 나머지는 D 통조림 공장에 90만 원에 팔았다. D 통조림 공장은 130만 원어치의 참치 통조림을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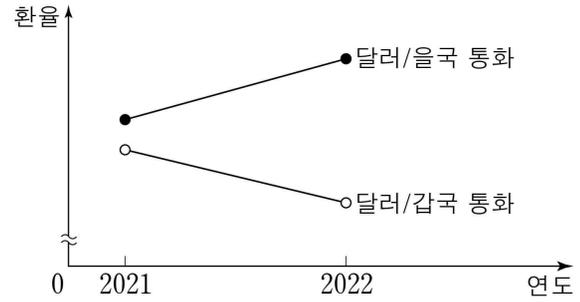
- ① 200만 원
- ② 210만 원
- ③ 220만 원
- ④ 230만 원
- ⑤ 240만 원

19. 다음 제시문에 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자: 최근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갑: 기업의 투자 감소가 지속되어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 을: 저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물가 하락은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 ① 갑은 총수요곡선이 수축적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 ② 갑은 피구효과(Pigou Effect)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 ③ 갑은 긴축통화정책보다 확대통화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 ④ 을은 총공급 충격에 의해 실질 GDP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⑤ 을은 총수요곡선이 탄력적일수록 물가하락폭이 더 크다고 볼 것이다.

20. 갑국과 을국의 환율 변화 추세가 다음 [그림]과 같이 예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환율 변화 이외의 변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갑국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하락하고, 을국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상승한다.
- ② 갑국 기업은 수출 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갑국 통화로 조기에 환전할수록 유리하다.
- ③ 달러 표시 부채가 있는 을국 기업은 부채 상환을 미룰수록 불리하다.
- ④ 을국 통화 대비 갑국 통화의 가치는 더 높아진다.
- ⑤ 갑국 여행을 계획하는 미국 사람은 여행 일정을 앞당기는 편이 유리하다.

21. 다음 [표]는 갑국의 2021년 국제수지표의 일부이다. 이에 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위: 억 달러)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소득 수지	이전소득 수지
120	-20	10	-35

- ① 갑국의 경상수지는 달러화 대비 갑국 통화 가치의 상승 요인이다.
- ② 해외 투자에 따른 배당금을 기록하는 항목은 적자이다.
- ③ 서비스 거래에 따른 외화 유입액이 유출액보다 많다.
- ④ 해외 공적개발 원조액을 기록하는 항목은 흑자이다.
- ⑤ 재화의 수입액은 수출액에 비해 120억 달러 많다.

22. 다음 제시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국과 을국은 모두 노동만을 생산요소로 사용하여 X재와 Y재를 생산하고 소비한다. 교역 시 양국은 각각 비교우위에 있는 재화의 생산에 특화한다. 다음 [표]는 각 재화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을 나타낸다.

구분	갑국	을국
X재	2시간	3시간
Y재	4시간	① 9시간

- ① 갑국에서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1/2 단위이다.
- ② 갑국은 X재와 Y재의 생산에 모두 절대우위를 갖는다.
- ③ 을국은 X재의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는다.
- ④ ①이 6시간으로 감소하면 양국이 교역으로부터 얻는 이득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⑤ Y재 3단위와 X재 5단위가 교환되면 양국은 모두 이득을 얻는다.

23. 케인즈(Keynes)의 거시경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명목임금의 단기적인 하방경직성을 강조한다.
- ②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총수요 증대를 통해 균형국민소득과 잠재적 국민소득 간의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③ 균형국민소득이 잠재적 국민소득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을 때 인플레이션갭(Inflationary Gap)이 발생한다.
- ④ 정부지출의 증가는 실질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 부문의 소비와 투자를 구축(crowding out)한다.
- ⑤ LM곡선의 기울기가 매우 완만하다고 주장한다.

24. 다음의 정보가 주어졌을 때, 솔로우(Solow) 성장 모형의 균형상태(steady state)에서 자본 1단위당 산출량은? (단, 기술진보는 없으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 총생산함수 :  $Y = 2L^{0.5}K^{0.5}$  (단,  $Y$ 는 총산출량,  $L$ 은 총노동량,  $K$ 는 총자본량이다.)
- 감가상각률 5%, 인구증가율 5%, 저축률 20%

- ① 0.5                      ② 1                      ③ 4
- ④ 8                        ⑤ 16

25. 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고정금리를 지급받는 채권자는 손해를 본다.
- ② 먼델-토빈(Mundell-Tobin) 효과란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인한 실질이자율의 하락과 투자의 증가를 말한다.
- ③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은 수요견인설에 의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비롯된다.
- ④ 중앙은행이 정부의 대규모 재정적자에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 ⑤ 실질화폐잔고에 대한 수요가 명목이자율에 의존하고 현재의 통화공급은 고정된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현재의 물가수준도 높아진다.

# 【 소방학개론 】

1. 다음 중 불연성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He(헬륨)
- ② CO<sub>2</sub>(이산화탄소)
- ③ P<sub>2</sub>O<sub>5</sub>(오산화인)
- ④ HCN(시안화수소)
- ⑤ SO<sub>3</sub>(삼산화황)

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상 통제단이 설치·운영되는 경우에 긴급구조지휘대를 구성하는 사람과 배치되는 해당 부서의 연결이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신속기동요원-대응계획부
- ㄴ. 통신지휘요원-구조진압반
- ㄷ. 안전담당요원-현장통제반
- ㄹ. 경찰과견 연락관-연락공보담당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3. 연소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연소범위는 물질이 연소하기 위한 물적 조건과 관련이 크다.
- ㄴ. 온도가 높아지면 연소범위는 넓어진다.
- ㄷ. 일산화탄소는 압력이 증가하면 연소범위가 넓어진다.
- ㄹ. 불활성기체가 첨가되면 연소범위가 좁아진다.

- ① ㄱ,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4. <보기>에서 공기 중 연소범위가 가장 넓은 것(㉠)과 위험도가 가장 낮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보 기>

수소, 아세틸렌, 메탄, 프로판

- |   | ㉠    | ㉡    |
|---|------|------|
| ① | 수소   | 메탄   |
| ② | 수소   | 아세틸렌 |
| ③ | 아세틸렌 | 메탄   |
| ④ | 아세틸렌 | 프로판  |
| ⑤ | 아세틸렌 | 아세틸렌 |

5. 복사열전달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열에너지가 전자기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현상이다.
- ② 푸리에의 법칙을 따른다.
- ③ 열전달이 고체 또는 정지상태의 유체 내에서 매질을 통해 이루어진다.
- ④ 유체입자의 유동에 의해 열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이다.
- ⑤ 진공상태에서는 복사열은 전달되지 않는다.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제1류 위험물 중에 무기과산화물은 주수를 이용한 냉각소화가 적합하다.
- ② 제2류 위험물은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 조연성 물질이다.
- ③ 제3류 위험물 중에 황린은 공기 중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물 속에 저장한다.
- ④ 제4류 위험물은 수용성 액체로 물에 의한 희석소화가 적합하다.
- ⑤ 제5류 위험물은 포, 이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소화가 적합하다.

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유별 위험물의 품명과 지정수량을 옳게 연결한 것은?

유별	품명	지정수량
① 제2류	적린, 유황, 마그네슘	100 kg
② 제3류	알킬알루미늄, 유기과산화물	10 kg
③ 제4류	제4석유류	10,000 l
④ 제5류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실아민염류	100 kg
⑤ 제6류	과염소산염류, 나트륨	200 kg

8. 다음은 수성막포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수성막포는 ( ㉠ )이 강하여 표면하 주입방식에 효과적이며, 내약품성으로 ( ㉡ )소화약제와 Twin Agent System이 가능하다. 반면에 내열성이 약해 탱크 내벽을 따라 잔불이 남게 되는 ( ㉢ )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며, 대형화재 또는 고온 화재 시 수성막 생성이 곤란한 단점이 있다.

	㉠	㉡	㉢
①	점착성	강화액	윤화
②	점착성	분말	선화
③	내유성	분말	선화
④	내유성	강화액	선화
⑤	내유성	분말	윤화

9. 할로젠화합물 소화약제 중 'HCFC BLEND A'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 ① HCFC-123
- ② C<sub>3</sub>HF<sub>7</sub>
- ③ HCFC-22
- ④ HCFC-124
- ⑤ C<sub>10</sub>H<sub>16</sub>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시설의 연결이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소화설비: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 경보설비: 통합감시시설, 시각경보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제연설비

㉣. 소화활동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⑤ ㉠, ㉡, ㉢, ㉣

11. 「국가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이 있다.
- ② 경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훈계, 경고가 있다.
- ③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관한 징계는 시·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 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2분의 1을 감한다.

12. 제3종 분말소화약제가 열분해될 때 생성되는 물질로써 방진작용을 하는 물질은?

- ① N<sub>2</sub>(질소)
- ② H<sub>2</sub>O(수증기)
- ③ K<sub>2</sub>CO<sub>3</sub>(탄산칼륨)
- ④ HPO<sub>3</sub>(메타인산)
- ⑤ Na<sub>2</sub>CO<sub>3</sub>(탄산나트륨)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 ② “재난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③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 ④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 ⑤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가뭄
- ② 폭염
- ③ 미세먼지
- ④ 황사(黃砂)
- ⑤ 조류(藻類) 대발생

15. 다음 조건에 따라 계산한 혼합기체의 연소하한계는?

- 르샤틀리에 공식을 이용한다.
- 혼합기체의 부피비율은 A기체 60%, B기체 30%, C기체 10%이다.
- 연소하한계는 A기체 3.0%, B기체 1.5%, C기체 1.0%이다.

- ① 1.0%
- ② 1.5%
- ③ 2.0%
- ④ 2.5%
- ⑤ 3.0%

16.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화재신호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을 경보함과 동시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통신망을 통한 당해 화재발생 및 당해 소방대상물의 위치 등을 음성으로 통보하여 주는 것은?

- ① 통합감시시설
- ② 비상경보설비
- ③ 비상방송설비
- ④ 자동화재속보설비
- ⑤ 단독경보형 감지기

17.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조사활동 중 본부장 또는 서장이 소방청장에게 긴급상황을 보고하여야 할 화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사망자가 10명 발생한 화재
- ② 이재민이 50명 발생한 화재
- ③ 재산피해가 100억 원으로 추정되는 화재
- ④ 항구에 매어둔 외항선 화재
- ⑤ 발전소 및 변전소의 화재

18. 정전기 예방대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공기를 이온화한다.  
 ㄴ. 전기전도성이 큰 물체를 사용한다.  
 ㄷ. 접촉하는 전기의 전위차를 크게 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계획의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 ( ㉠ )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 ㉡ )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 ㉢ )은/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 ㉣ )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	㉡	㉢	㉣
① 국무총리	1	행정안전부장관	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5	행정안전부장관	5
③ 행정안전부장관	1	국무총리	1
④ 국무총리	5	국무총리	5
⑤ 행정안전부장관	5	국무총리	5

2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방폭구조는?

정상시 및 사고시(단선, 단락, 지락 등)에 발생하는 전기불꽃, 아크 또는 고온에 의하여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되지 않는 것이 점화시험 및 기타에 의하여 확인된 방폭구조

- ① 내압방폭구조
- ② 압력방폭구조
- ③ 안전증가방폭구조
- ④ 유입방폭구조
- ⑤ 본질안전방폭구조

21. 스프링클러설비 종류별 주요 구성품의 연결이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알람벨브, 개방형 헤드  
 ㄴ.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익조스터(Exhauster), 공기 압축기  
 ㄷ.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선택벨브, SVP (Supervisory Panel)  
 ㄹ.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일제개방벨브, 개방형 헤드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 ②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 ④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3. 다음 중 화학적 폭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수증기폭발
- ② UVCE
- ③ 분해폭발
- ④ 분진폭발
- ⑤ 분무폭발

2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제1류 위험물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체로서 (㉠)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       |    |
|-------|----|
| ㉠     | ㉡  |
| ① 폭발력 | 발화 |
| ② 산화력 | 충격 |
| ③ 환원력 | 분해 |
| ④ 산화력 | 폭발 |
| ⑤ 환원력 | 연소 |

2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한다.
- ② 소방특별조사는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
-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소방·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④ 소방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된다.
- ⑤ 소방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